



#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 수영구보

호외 제634호 2021. 12. 29.(수)

###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4
-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7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2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28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32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3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4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49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54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6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64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70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7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8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8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0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10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1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11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12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13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14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 규 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5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161

## 훈 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17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8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용직공무원 임용 규정 폐지규정-----	18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소양고사 규정 폐지규정-----	18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	189

## 예 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192
---	-----

회 람							
--------	--	--	--	--	--	--	--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기획전략과 (610-407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86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5조와 제16조”를 “제21조”로, “조례 제정·개폐와 감사 청  
구”를 “감사 청구”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를 “제21조”로, “연  
서”를 “연대 서명”으로 하고,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의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제1조, 제2조제2항)

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내용 삭제(제2조제1항)

라. 감사청구 연령 변경(제2조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심의)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 업무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

② 의견제출 관련 소관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검토서를 작성할 때 의견 제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4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제8조(의견의 통보)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b>의견제출인</b>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span style="float: right;">[    ] 대표자</span>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b>의견</b>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b>참고자료</b>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제2조, 제3조)
- 나. 의견 제출 제외 대상(제4조)
- 다. 의견제출 방법(제5조)
- 라. 의견 제출의 보완요구 및 다른 기관 이송(제6조)
- 마. 의견 제출의 검토(제7조)
- 바. 의견의 통보 및 반영(제8조, 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8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4조의2제1항·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7조제1항 및 제4항”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으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 제2호”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 제2호”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한다.

제16조(「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 정비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15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89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659명”을 “6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7명”을 “65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2명”을 “1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구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66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62	-			
3급	1	1			
4급	5	4		1	
5급	38	21	2	5	10
6급 이하	61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2	-			

비고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정원을 포함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2022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배정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659명에서 666명으로 조정(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별표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0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련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관련법인”을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련법인”을 각각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련법인의 의무)”를 “(관련기관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관련법인”을 각각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련법인”을 각각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련법인”을 각각 “관련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 의뢰 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개정(제1조)

나. 경쟁제한적 규정 개선(제2조~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1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110만원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 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제명 변경 및 재정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제1조, 제7조)
- 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제2조제1호)
- 다. 재정정보증한도액 증액(제4조)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2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을 “(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식정보자원을”을 “국가지식정보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 정비

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단어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3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행하거나”를 “추진하거나”로 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 되었음으로 조례에 인용된 제명을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어 개정(제6조)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준용 내용 삭제(제1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4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근로자 및 청원경찰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 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 부담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피 해 공 무 원	부 서 명			
	직위 · 직급			
	성 명	(연락처 : )		
민원내용	발 생 일			
	민원명 및 민원내용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공 무 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사항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첨부자료	<input type="checkbox"/> 진단서 · 입원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진료 · 약제비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부 서 장 확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제안이유**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제2조)

나. 지원사항(제3조)

다. 안전시설 확충(제4조)

라. 지원방법 및 지원 신청(제5조~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5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며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기초로 분석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
5.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등의 지원
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노인 친화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 관리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학대 예방 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행사 지원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 또는 어버이 날 등의 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효행 및 노인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기업체·학교·단체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구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5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고령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추진관련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원
2. 노인복지분야 관련 전문가

### 3. 노인복지 정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의 조사·점검
2. 일생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② 모니터단은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본이념(제1조~제2조)
- 나. 정의 및 구청장 등의 책무(제3조~제4조)
- 다.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제5조~제14조)
- 라.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제16조)
- 마.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6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3. “관리인”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상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침수방지시설을 보강·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1천만원 이하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책무 및 지원계획수립(제3조~제5조)
- 다. 실태조사(제6조)
- 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7조~제8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제9조~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7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영구”를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각 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대응과장”을 “현장대응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치등교육지원과장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풍부한 자중에서”를 “풍부한 사람 중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위원 직위 명칭 현행화(제3조제2항)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 제3조제2항, 제6조, 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로, “감액기준등에”를 “감액기준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노외주차장중”을 “해당 노외주차장 중”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등이 6개월 이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제명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3호)
-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99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미관에 저해되지”를 “미관을 해치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자전거 운영에”를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로 한다.

제15조 중 “규칙을”을 “규칙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 (제6조제2항, 제3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7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0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 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재 및 관광자원 등의 관리
8. 해양 환경 모니터링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

② 구청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드론육성 사업의 육성 및 사업의 확대(제4조~안 제5조)
- 라. 재정지원(제6조)
- 마.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제7조)
- 바.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제8조)
- 사. 사업의 위탁(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1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영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 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 제6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실태조사(제4조)
-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제5조~안 제6조)
- 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7조~안 제11조)
- 바. 협력체계 구축(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2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구청장의 책무(제3조~제5조)
- 다.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6조)
- 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제9조)
- 마. 예산지원, 교육,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제10조~제12조)
- 바.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지도·감독(제13조~제1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3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 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다. 경비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라. 우선구매,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마. 홍보, 준용, 시행규칙(제9조~제1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4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구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 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사무과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결혼과 사망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제14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선서문

###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무원 헌장

##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별표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제2조)
- 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사항(제3조~제8조)
- 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제9조)
- 라.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제10조~제12조)
- 마. 연가 계획수립·허가,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14조)
- 바. 연가 가산 및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제16조)
- 사. 공무 외의 국외여행(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5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에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 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 보험 지원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제2조~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제4조)

다. 후생복지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제7조)

마. 후생복지제도의 구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6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 70,000, 광역시 : 60,000, 그 밖의 지역 : 50,000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6.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숙박비는 1박당 제1호는 56,000원, 제2호는 40,000원으로 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제2조)
-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및 여비 지급 구분(제3조, 제4조)
- 다.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7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험수당(제2조)

나. 여비(제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8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와 적용범위(제2조, 안 제3조)

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 제외 등  
(제4조, 제5조)

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제6조)

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증명(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대서명 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준용)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조례의 [ ] 제정 [ ] 개정 청구서 [ ] 폐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input type="checkbox"/>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직인</div> </div>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회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5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color: red;">직인</div>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95호, 시행 2022. 1. 13]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제2조)
-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제3조)
-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제4조~안 제 6조)
- 라. 청구인명부 및 공표, 열람(제7조, 안 제8조)
- 마.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제10조, 안 제11조)
- 바. 구청장의 사무협조(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10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 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2.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공무원 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제3조)
- 나.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지원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제7조)
- 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11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수영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18조”를 “제25조”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지방



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과 영 제43조제1항”을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43조제4항”을 “영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41조제5항과 영 제43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 영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선서문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1조”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제3항”을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3호 ”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2호”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사무과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개정(제1조)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제4조의2)

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제1조, 안 제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13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수영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청원심사”를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청원심사”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개정(제1조)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포함(제9조)

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반영(제13조, 제15조)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제1조, 제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34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총 계	666	462(3)	15	57	132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662	459(3)	14	57	132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8	21	2	5	10
행정사무관	20	13	2		5
의무사무관	3			3	
시설사무관	3	3			
행정·사회복지사무관	7	2			5
행정·시설사무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환경사무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2			2	
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6급 소계		163	133	3	7	20
행정주사		83	72	3	1	7
세무주사		15	15			
사회복지주사		8	3			5
사서주사		1	1			
공업주사		1	1			
녹지주사		1	1			
전산주사		1	1			
방송통신주사		1	1			
환경주사		1	1			
시설주사		8	8			
행정·세무주사		7	4			3
행정·사회복지주사		18	13			5
행정·공업주사		2	2			
행정·보건주사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주사		1	1			
행정·시설주사		2	2			
행정·방송통신 주사		1	1			
행정·해양수산·농업주사		1	1			
행정·공업·환경주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5			5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주사		1			1	
운전주사		2	2			
기계운영주사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7급 소계		187	134	8	14	31
행정주사보		82	62	5	1	14
세무주사보		12	12			
사회복지주사보		34	17			17
전산주사보		2	2			
사서주사보		4	4			
속기주사보		2		2		
공업주사보		4	4			
녹지주사보		2	2			
행정·수의·농업주사보		1	1			
해양수산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3	1		2	
식품위생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3			3	
약무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6			6	
환경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4	14			
방송통신주사보		3	3			
환경·보건·공업주사보		1	1			
운전주사보		7	5	1	1	
사무운영주사보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8급 소계		173	103(2)	1	24	45
행정서기		71	44(2)	1	1	25
세무서기		8	8			
사회복지서기		26	6			20
전산서기		4	4			
사서서기		3	3			
공업서기		9	8		1	
녹지서기		2	2			
해양수산서기		2	2			
보건서기		3	1		2	
식품위생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간호서기		17			17	
시설서기		16	16			
방송통신서기		1	1			
행정·보건서기		1			1	
행정·환경서기		1	1			
보건·간호서기		1			1	
환경·공업서기		1	1			
행정·방송통신서기		1	1			
운전서기		3	3			
방재안전서기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9급 소계		95	63(1)		6	26
행정서기보		51	37(1)		1	13
세무서기보		2	2			
사회복지서기보		15	2			13
사서서기보		5	5			
보건서기보		4			4	
식품위생서기보		1	1			
환경서기보		2	2			
시설서기보		6	6			
방송통신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2	1		1	
방재안전서기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2			
녹지서기보		1	1			
별정직 계		3	2	1		
5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전문위원)		1		1		
6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비서요원)		1	1			
7·8급상당 소계		1	1			
8급상당 별정직(비서요원)		1	1			

※ 비고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 정원을 포함한다.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 제안이유**

2022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배정인력 반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개정 (별표)

- 총계란 중 총계 659⇒666, 구분청 459⇒462, 의회사무과 12⇒15, 보건소 56⇒5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35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를 “구의 정보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되어 있는”을 “관련되어 있는”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및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에서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정보
4.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평가
6. 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 관련 자료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 주기·시기

·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로, “2일이내에”를 “2일 이내에”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중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운영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를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제5조 관련)

담당부서				
이의신청자	이름		이의신청 일자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결정을 요하는 사항				
참고사항				





[별지 제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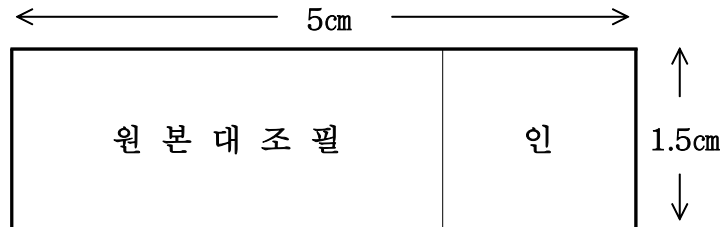
## 회 의 례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 원본대조필



**◆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일부개정, 2021.12.23.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서면심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변경된 용어 반영 및 사전공개 대상 정보 정비(제3조의2)
- 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제4조)
- 다. 서면심의 운영근거 마련(제6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4조~제8조)
- 마.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1]

본청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구분청 과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합계		462	
기획전략과	4급	1	행정직1
	5급	1	행정직1
	6급	11	행정직9, 세무직1, 기계운영직1
	7급	8	행정직6, 사회복지직1, 시설직1
	8급	7	행정직7
	9급	1	행정직1
	소계	29	
스마트도시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4, 시설직1
	7급	4	행정직2, 시설직2
	8급	1	행정직1
	9급	2	행정직1, 행정·전산·방송통신직1
	소계	13	
평생교육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4, 사서직1
	7급	7	행정직3, 사서직4
	8급	7	행정직2, 사서직3, 전산직1, 공업직1
	9급	9	행정직4, 사서직5
	소계	29	
일자리경제과	5급	1	행정·농업·녹지직1
	6급	7	행정직4, 행정·공업직1, 행정·해양수산·농업직1, 녹지직1
	7급	8	행정직2, 행정·수의·농업직1, 녹지직2, 해양수산직1, 운전직1, 사무운영직1
	8급	8	행정직2, 공업직2, 녹지직2, 해양수산직2
	9급	1	행정직1
	소계	25	

구분청 과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행정지원과	정무직	1	정무직1(구청장)
	3급	1	행정직1
	4급	1	행정직1
	5급	1	행정직1
	6급	9	행정직7, 전산직1, 운전직1
	7급	10	행정직6, 전산직2, 운전직2
	8급	9	행정직6, 전산직3
	9급	1	행정직1
	별정직	2	6급상당1(행정·별정직), 8급상당1
	소계	35	
문화관광과	5급	1	행정직1
	6급	7	행정직7
	7급	6	행정직6
	8급	3	행정직3
	9급	3	행정직3
	소계	20	
재무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4, 방송통신직1
	7급	4	행정직2, 방송통신직2
	8급	4	행정직2, 방송통신직1, 공업직1
	9급	3	행정직1, 방송통신직1, 공업직1
	소계	17	
민원여권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5
	7급	4	행정직4
	8급	5	행정직5
	9급	3	행정직2, 운전직 1
	소계	18	
세무1과	5급	1	행정직1
	6급	8	세무직8
	7급	6	세무직6
	8급	4	세무직4
	9급	1	세무직1
	소계	20	



구분청 과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세무2과	5급	1	행정직1
	6급	9	세무직6, 행정·세무직 3
	7급	5	세무직5
	8급	4	세무직4
	9급	1	세무직1
	소계	20	
복지정책과	4급	1	행정직1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1, 행정·사회복지직4, 사회복지직1
	7급	9	행정직3, 사회복지직6
	8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9급	5	행정직3, 사회복지직2
	소계	26	
가족행복과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6	행정직1, 행정·사회복지직5
	7급	8	행정직5, 사회복지직3
	8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9급	2	행정직2
	소계	21	
기초생활 보 장 과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6	행정·사회복지직4, 사회복지직2
	7급	8	행정직1, 사회복지직7
	8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9급	3	행정직3
	소계	22	
자원순환과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4, 행정·공업·환경직1, 운전직1
	7급	6	행정직5, 공업직1
	8급	3	행정직2, 공업직1
	9급	2	행정직1, 공업직1
	소계	18	
환경위생과	5급	1	행정·보건·식품위생·환경직1
	6급	5	행정직2, 행정·보건직1, 행정·보건·식품위생직1, 환경직1
	7급	7	행정직1, 식품위생직2, 보건직1, 환경·보건·공업직1, 환경직2
	8급	4	행정·환경직1, 환경·공업직1, 보건직1, 식품위생직1
	9급	3	식품위생직1, 환경직2
	소계	20	

구분청 과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안전관리과	4급	1	기술직1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3, 행정·시설직1, 행정·방송통신직1, 공업직1
	7급	7	행정직1, 시설직2, 방송통신직1, 공업직2, 운전직1
	8급	5	행정직1, 행정·방송통신직1, 방재안전직1, 공업직2
	9급	2	방송통신직1, 방재안전직1
	소계	22	
교통행정과	5급	1	행정직1
	6급	7	행정직5, 행정·공업직1, 행정·세무직1
	7급	7	행정직5, 세무직1, 운전직1
	8급	3	행정직1, 공업직1, 운전직1
	9급	3	행정직2, 시설직1
	소계	21	
도시관리과	5급	1	행정·시설직1
	6급	5	행정직5
	7급	6	행정직6
	8급	5	행정직3, 운전직2
	9급	11	행정직10, 녹지직1
	소계	28	
건축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2, 시설직3
	7급	3	시설직2, 공업직1
	8급	9	행정직2, 시설직7
	9급	3	행정직2, 시설직1
	소계	21	
건설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2, 시설직3
	7급	6	행정직1, 시설직5
	8급	6	행정직1, 시설직5
	9급	1	시설직1
	소계	19	
토지정보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3, 시설직1, 행정·시설직1
	7급	5	행정직3, 시설직2
	8급	4	시설직4
	9급	3	시설직3
	소계	18	

## [별표 2]

의회사무과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의회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의회사무과	5급	2	행정직2
	6급	3	행정직3
	7급	8	행정직5, 속기직2, 운전직 1
	8급	1	행정직1
	9급		
	별정직	1	5급상당1(행정·별정직)
	소계	15	

## [별표 3]

보건소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보건소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합계		57	
보건행정과	4급	1	기술직1
	5급	3	의무직2,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직1
	6급	4	행정직1, 보건·의료기술·간호직2,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직1
	7급	9	행정직1, 간호직2, 약무직1, 보건직1, 의료기술직3, 운전직1
	8급	6	행정직1, 간호직1, 보건직1, 의료기술직1, 보건·간호직1, 공업직1
	9급	5	행정직1, 운전직1, 보건직3
	소계	28	
건강증진과	5급	2	의무직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직1
	6급	3	보건·의료기술·간호직3
	7급	5	간호직4, 보건직1
	8급	18	행정·보건직1, 간호직16, 보건직1
	9급	1	보건직1
	소계	29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사항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별표의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사항을 개정(별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60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제7조제1항 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제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제7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제7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무원직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제4조)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변경 조문 반영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용직공무원 임용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61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용직공무원 임용 규정 폐지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용직공무원 임용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11.8.24 시행)으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용직공무원 임용 규정」을 폐지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소양고사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62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소양고사 규정 폐지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소양고사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동 직원의 구분청 전입시험 방법 개선 이후 소양고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소양고사 규정」을 폐지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63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에 적용되는 실효성이 낮아 규정을 폐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폐지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규 제98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 실·국장”을 “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2021.7.1.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현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2021.7.1.자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제12조, 제13조)
- 실·국장 → 국장, 총무과장 → 행정지원과장